

#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박병광 책임연구위원  
bkpark@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최근 미중 분쟁의 성격
- III. 미중 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입장
- IV. 미중 분쟁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입장
- V. 정책 고려사항 및 우리의 대응방향

## 국문 초록

현재 우리는 미중 '패권경쟁의 서막'을 목도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패권경쟁은 전면전쟁으로 공멸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규범과 질서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결이란 특징을 지닌다. 중국도 작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서 단순히 무역·통상을 둘러싼 분쟁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국은 미국과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압박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세부과로 시작된 미중 경제마찰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두고 벌이는 기술전쟁으로 비화되었으며, 조만간 환율, 국방 및 안보 부문으로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될수록 한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장기적 차원의 '패권전쟁의 서막'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향후 계속해서 이슈와 영역을 달리하며 미중 분쟁에 따른 선택의 딜레마와 마주할 것이란 점에서 청와대에 '미중관계 대응팀'을 조직해야 한다.

---

핵심어: 미중관계, 무역전쟁, 패권경쟁, 선택의 딜레마

---

## I. 문제 제기

- 1972년 관계정상화 이후 미중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면서도 큰 틀에서 ‘갈등속의 협력’을 추구해 왔음<sup>1)</sup>
  - 미국과 중국은 지배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 및 지정학적 대립구조 속에서도 최대한 충돌을 피하면서 그 동안 상호의존과 공동발전을 추구해 왔음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부딪히고 있으며 이는 마치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시진핑(習近平)의 ‘중국의 꿈(中國夢)’이 충돌하는 양상
  
-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패권경쟁의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정부가 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발표(2018.4)한 이후, 양국 간 본격화된 무역전쟁은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 당초 미중 분쟁은 무역적자 해소를 빌미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단순한 무역 갈등과 기술 분쟁을 뛰어 넘어 그 영역이 금융, 군사, 안보 등 무한대결의 성격으로 비화하고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는 2018년 4월부터 12월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회의까지로 미중 양국은 당시 정상 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타결을 위한 협상에 공감대를 형성
  - 2단계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이후 2019년 5월까지로 양국은 11차례의 고위급 실무 협상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였으며, 협상 결렬 후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제재발표(5.16)’를 단행
  - 3단계는 2019년 5월 협상 결렬 이후 12월까지로서 미국은 화웨이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기술분야에서 대중 압박을 가속화하면서 미중 분쟁의 전선이 확대
  - 4단계는 2019년 12월 1단계 미중 무역협상 타결 이후 최근까지로서 무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불씨는 잔존

1) 박병광, “국제질서 변환과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국방연구』 제57권 1호(2014), p. 118.

- 21세기 국제정치학의 가장 큰 화두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기존 패권국 미국의 대응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의 유례없는 미중간 갈등의 격화는 양국간 분쟁의 성격이 무엇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미중간의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단순한 무역전쟁 △전략적 경쟁 △패권경쟁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뉘는 것으로 평가됨
  - 이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을 규명하고,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함

## II. 최근 미중 분쟁의 성격

### 1. 21세기 미중관계의 기본 구조

- 21세기 미중관계의 기본구조와 성격을 가장 간명하게 규정하자면 ‘갈등속의 협력’과 ‘전략적 불신속의 협력’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미중관계는 1972년 관계정상화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 갈등구조의 바탕 위에서 선택적 필요와 국가이익에 따라 협력을 추구하는 ‘갈등속의 협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또한 미중관계는 협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상호 전략적 불신을 저변에 깔 상태에서 현실적 필요에 의한 협력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략적 불신속의 협력’으로 묘사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미중 양국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이슈와 영역에 따라 선택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갈등으로 증폭된 대립과 마찰이 상호이익과 안정을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sup>2)</sup>

2) 이와 같은 미중관계는 하딩(H. Harding)이 주장한 바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관계(fragile relationship), 또는 램프턴(D. Lampton)이 묘사한 것처럼 동상이몽(same bed different dreams)의 관계’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2); David M. Lampton,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S.-China Relations, 1989-20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20세기와 달리 21세기에 확연히 드러나는 미중 간 종합국력의 축소는 양국관계를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10년부터 세계 2위로 올라섰고, 2012년 말 기준 세계 1위 외환보유국(3조 3,000억 달러)이 되었으며, 2013년에는 세계 최대교역국(4조 2천억 달러)으로 부상
  - 중국은 국방부문에서도 2009년부터 세계 2위 국방비지출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두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J-20)를 실전 배치하고,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SLBM을 보유
  - 미중관계는 경제부문에서의 상호의존과 별개로 군사부문에서는 대립구조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對아시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을 추구<sup>3)</sup>
- 결국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혼재 속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동상이몽’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하며 아 태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님
  - 미중 양국의 갈등과 협력은 단순히 양자관계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적·세계적으로도 매우 커다란 파급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이는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선적 전략으로는 양국관계를 풀어가기가 어려우며 서로를 상대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표 1] 미국과 중국의 아 태지역 패권경쟁 양상

미국	경쟁영역	중국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의 경제·군사적 우위 유지	기본입장	‘중국의 꿈’을 강조하며, 신형국제관계 수립 추구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내세우며 대중국 무역전쟁 선포	경제	‘일대일로’ 전략을 추구하면서 아세안(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 한·중·일 FTA추진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F-35 판매, 줌월트 배치 등 추구	군사	스텔스전투기 쟈-20(J-20) 실전 배치 및 첫 자체개발 항모 진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태지역 다자무대 적극 참여. 對인도 협력강화	외교	러시아와 유대강화 및 일본관계 개선. 주변국관계 개선 추진.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하면서 중국 견제 강화	안보전략	접근거부/지역거부(A2/AD)전략을 통한 대미개입 대응

3)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에 관해서는 김성걸, “중국의 반접근(A2), 지역거부(AD) 군사능력 평가,” 『군사논단』, 제70권(2012), pp. 42-67 참조.

## 2.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

-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미중 무역마찰은 강대국들 사이의 무역·통상이슈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 이라기보다 ‘패권경쟁의 서막’으로 보는 것이 타당<sup>4)</sup>
  - 과거 전통시대의 패권경쟁은 기존의 패권국과 도전하는 부상국이 서로를 적(enemy)으로 규정하고 패권(hegemony)획득을 목적으로 전면전쟁을 벌이는 양태를 보여 왔음<sup>5)</sup>
  - 그러나 핵(核)이라는 공멸의 무력수단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무력사용 전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의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둘러싼 ‘규범과 질서의 전쟁’이라 할 수 있음
- 본질적으로 신흥강대국의 부상은 기존 패권국으로 하여금 언제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모색하도록 만들었음<sup>6)</sup>
  - 첫째, 부상하는 강대국의 부상을 좌절시킴으로써 자국의 상대적 이익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하거나
  - 둘째, 부상하는 강대국의 부상 자체를 좌절시키기 어려울 경우 부상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며
  - 셋째, 부상하는 강대국의 부상과정과 결과를 자국의 이익에 맞도록 조절하기 위해 관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음
- 미국에게 있어서도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역대 행정부에서 적잖은 고민거리였으며 전략적 숙제로 작용해 왔음
  - 그러나 중국의 경제·군사적 힘이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전략을 취하기 시작

4) 패권이란 국제질서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점적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국가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긴요한 가치, 목표 및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유지해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5)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2017)'에서 중국을 적(enemy)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경쟁자(competitor)이자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20세기 적(enemy)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 (Washington D.C: White House, 2017).

6) 전재성,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제51권 3호(2008), pp. 7-8.

- 최근의 미중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와 시진핑의 ‘중국의 꿈 (中國夢)’이 부딪히는 양상이며, 미국의 목적은 중국의 도전(challenge)에 관한 의지와 능력을 ‘굴복’ 또는 ‘좌절’시키는 데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정책은 공화 민주 양당은 물론이고 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을 지니지만 문제는 장기전략이 부재(不在)하다는 것으로 평가<sup>7)</sup>

[표2] 신중국 수립 이후 미 중 관계

연도	주요 사안
1949	신중국 수립, 주중 미국대사관 대만으로 철수
1950	중국, 한국전쟁 참전
1972	닉슨 대통령 방중, 미·중 상하이 공동성명 발표
1978	미·중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
1979	미·중 수교, 상주대사관 설치
1982	8·17 공동성명(중국 유일합법정부 인정)
1989	천안문사건 발생, 미국 대중제재 실시
1997	장쩌민 주석 방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
1999	미국 등 나토군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
2001	중국 WTO 공식 가입, 美해군정보기(EP-3) 충돌사건
2006	후진타오 주석 방미, 중국 인권개선 압박
2009	오바마 대통령 방중, 중국 국제사회 역할 인정
2012	시진핑 부주석 방미, 신형대국관계 제시
2017	트럼프 대통령 방중, 중국 대미수입확대 천명
2018	미·중 상호 관세부과, 무역전쟁 개시
2019	신중국 성립 70주년, 미·중수교 40주년

7) 예를 들어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노동자와 상품을 위해 더 싸워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SCMP, November 7, 2018.

### Ⅲ. 미중 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입장

-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최근의 분쟁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등장에 따른 단기간의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의 토론을 거친 결과로 평가하고 있음<sup>8)</sup>
  - 중국은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이후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전략가들과 정치계를 중심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날 중국에 대한 공세적 압박이 시행된 것으로 평가
  -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말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경쟁자 (competitor)’, ‘수정주의자(revisionist)’, ‘도전자(challenger)’로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중국 압박을 가시화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
  
-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중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서 단순히 무역·통상을 둘러싼 분쟁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중국은 그 근거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국유기업개혁, 개발도상국지위 박탈, 중국제조 2025 등 무역문제를 뛰어 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제시
  -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구체화 되고 있으며 △중국전문가와 유학생 비자 제한 △2018년 대만여행법 통과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점 △신장위구르문제에 대한 개입 등을 근거로 평가
  
- 중국정부는 2018년 9월에 이어 2019년 6월 2일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하고 입장을 표명<sup>9)</sup>
  - 동 백서에서 중국정부는 “무역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고, 중국정부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백서는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정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은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며,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 요컨대 중국의 무역협상 백서는 중국정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협상 실패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탐욕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종 타결과 추후 협상에 대한 희망을 내보이는 것으로 평가

8)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소속 미중관계전문가 인터뷰(2019.6.12.)

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關於中美經貿磋商的中方立場』(北京: 人民出版社, 2019).



- 그러나 백서에서 “중국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압박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
  -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일 중국이 양보할 경우 미국의 승리로 착각하고 중국에 더 많은 불합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sup>10)</sup>
  - 따라서 중국은 미중 분쟁을 장기전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미국에 비해 공산당 지배체제하에서의 사회통제능력 등 내구성이 강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미중 대결을 ‘지구전’으로 가져가면서 기회를 엿보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sup>11)</sup>
  
- 한편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중 분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굴기와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
  - 시진핑으로서는 미중 분쟁에서 패배하고 미국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종결될 경우, 패배의 결과는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음
  - 때문에 시진핑은 미중 분쟁이 격화될수록 공산당지배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당 간부와 인민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요구하고 동시에 민족주의적 정서에도 호소하는 접근법을 구사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으로서는 미중 분쟁이 격화되는 것과 더불어 홍콩사태 악화 및 대만문제가 격화되는 등 전선(戰線)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10)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소속 미중관계전문가 인터뷰(2019.6.12.)

11) 중국 환구시보는 “미국은 기습전에 강하지만 중국이 장기전에는 명백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環球時報』 2019年 8月 25日.

## IV. 미중 분쟁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입장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과거의 협력과 경쟁에서 ‘견제’와 ‘대결’로 전환되었으며 강력한 대중국 압박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중국정책은 실패했고, 중국에 이익을 안겨주었으며, 중국의 부상을 방관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해 중국을 현상파괴세력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처하려는 전략목표를 수립<sup>12)</sup>
  -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 규칙, 제도를 준수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지역 및 세계질서와 제도 및 규범(Sino-centric regional and global order and rules)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
    - ※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대중국 인식 및 정책목표는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 전략을 구사하게 만들고 있으며, 압박과 마찰 및 분쟁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sup>13)</sup>
- 미국은 오늘날 국제질서는 ‘부상하는 중국’에서 ‘도전하는 중국’의 시대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직접 압박과 더불어 ‘인도·태평양구상’을 통한 국제연대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구상은 ‘트럼프판 재균형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인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차이점을 지니지만 아직도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로 작용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구체성과 치밀성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만 현재는 중국의 취약점을 찾아 공략하거나 경쟁하는 데 치중하는 것으로 평가

12) 최강, “미국우선주의 대 중국몽의 충돌,” 『미래한국』 2019년 3월 28일.

13)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입장을 잘 보여주는 글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Mike Pence,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Hudson Institute Remarks*, October 4, 2018; Nikki Haley, “How to Confront on Advancing Threat From China,” *Foreign Affairs*, July 18, 2019.

-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각은 여·야를 불문하고 대체로 긍정적 지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다른 양상<sup>14)</sup>
  - 과거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대체로 공화당의 강경정책과 민주당의 관여정책으로 대별되었으며, 경제계의 경우에도 대중투자관계 및 기업이익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여 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 중국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매우 약화된 상태이며, 전략적 불신이 증가하고, 정계는 물론이고 재계와 언론 등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 증가하고 있음
    -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동조는 미중 분쟁이 트럼프 개인의 돌출행동이나 정치적 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미국의 국가이익과 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
  
- 미국은 중국의 도전(challenge) 의지를 꺾고자 한다는 점에서 비록패권전쟁 중에 ‘협상’과 ‘휴전’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슈와 영역을 달리하며 분쟁과 압박을 이어갈 전망
  - 미국 주도의 미중 분쟁은 이미 무역·통상분야를 둘러싼 관세전쟁에서 시작하여 화웨이를 상징으로 하는 하이테크 기술전쟁, 환율·금융전쟁, 군사안보영역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
  -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뿐 아니라 중국의 슈퍼컴퓨터 제조 관련 기업 5곳에 대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black list)에 올렸으며<sup>15)</sup>,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음
    - ※ 미국은 과거 1980년대 중반 일본과 독일의 급속한 환율절상을 통해서 추격을 따돌린 사례가 있으며, 당시 협상단 부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우저가 현재 미중 무역협상의 대표라는 점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판단

14) 최근까지도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중국에 관한 한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량을 주는 쪽을 택해왔다고 미국의 언론은 평가함.  
Wall Street Journal, May 12, 2019.

15) Wall Street Journal, June 21, 2019.

## V. 정책 고려사항 및 우리의 대응방향

### 1. 평가와 고려사항

- 미국과 중국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극단적 상황은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미중 양측의 전략적 불신이 심화되고 중국이 잠재적 위협에서 직접적 위협으로 등장하고는 있지만 공멸의 위험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일정 수준에서 양측의 타협 가능성은 존재함
  - 그러나 미국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은 중국에게 패권(hegemony)을 넘기거나 대체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반해,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대체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음을 알리고 패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치중할 전망
    - ※ 따라서 미중 분쟁은 현재 양측 모두 극단의 상황에 대처할 능력과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패권경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줌
  
- 미중 대립과 분쟁의 격화는 주변국들에게 ‘선택의 딜레마’와 ‘전략적 가치 제고’라는 양 측면에서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전망
  -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이 가속화·장기화될수록 가치와 규범을 매개체로 역내 협력과 역외 협력자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태전략’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
  - 유럽은 자체 협력 강화를 통해 대미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중국을 경계하는 양방전략(hedging)을 구사하고 있으며, 동남아는 고민하지만 대책과 행동은 부재하고 분열되는 양상이며, 중동은 대미의존을 강화해 가는 모습
    - ※ 동북아에서 일본은 미국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과 자체능력 강화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뚜렷한 원칙이나 전략을 수립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
  
- 미중분쟁과 패권경쟁의 도래는 역내 국제정치 지형에서 한국의 입지와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미중관계가 갈등과 견제의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이 성립되지 않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사드(THAAD)배치 과정에서 미중 강대국의 대립에 연루되어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된 경험이 있으며, 향후에도 인도·태평양전략동참, INF문제 등으로 언제나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
  - ※ 전통적인 미국의 우호국들은 일반적으로 대중국 공세를 지지하지만 미국의 과도한 자국중심주의와 고압적 태도, 나아가 다자주의 후퇴를 초래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표출하고 있음
-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독립적 공간과 자율성의 제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화된 영역을 확보하고 전략적 가치 제공방안을 고민할 필요
  -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거대게임 변화에 우려를 지닌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외교적 활동공간을 확대해 나갈 필요
  - 동맹국들 간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우리와 유사한 선택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과의 협력망 구축을 더 적극 고려해야 함<sup>16)</sup>

## 2. 우리의 대응방향

- 미중 분쟁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방향 수립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정확한 상황인식’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단순한 무역·통상 분쟁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패권전쟁의 서막’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작금의 상황을 단순히 미국이 통상적자를 해소하거나 무역우위를 점하기 위한 분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며, 트럼프가 재선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단견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목도하고 있는 미중 분쟁은 무역통상 ⇒ 하이테크 기술 ⇒ 금융 ⇒ 군사안보 등 전역에 걸친 장기적 패권전쟁의 초입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함, 신중함, 중장기 전략 모색의 태도를 취할 필요

---

16) 과거 우리 정부는 중견국(middle power)들 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해 MIKTA를 주도한 적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테일한 협력과 교류의 연계망을 필요로 함.

- 우리정부와 국민은 미중 대립과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양측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식’ 논리를 지양하고 경계할 필요
  -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급하고 어설픈 일방적 편승’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달리 어느 한쪽에 올인하기 어려운 지정학적·역사적 정치경제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함
  - 동시에 미중 분쟁으로 인해 우리가 일방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포비아(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으며, 패권경쟁은 주변국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야 하는 ‘관중의 국제정치’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 그러나 미중 분쟁이 격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외전략을 수립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손실’을 외교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국의 ‘중요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대내외적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외교공간을 확장할 필요
  - 중국이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강조하고, 미국이 ‘사활이익(vital interest)’을 주장하듯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고민할 필요
  -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적 원칙과 기준의 부재는 한국으로 하여금 임기응변식 대응의 유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강대국 사이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깊숙이 연루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음
    - ※ 한국은 강대국에 끼인 지정학적 현실이 있지만 결코 약소국이 아니며 언제까지나 강대국의 그림자와 영향권에 갇힌 국가(shadow state)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국 및 중견국 연대의 외교공간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sup>17)</sup>
  
- 한국은 향후 계속해서 이슈와 영역을 달리하며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딜레마와 마주할 것이란 점에서 청와대에 ‘미중관계 대응팀’을 조직할 필요
  - 청와대는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조직이란 점과 더불어 중국문제의 중요성 및 미중갈등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반드시 중국전문가를 보강하고, ‘미중관계 대응팀’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필요

---

17) ‘그림자 국가(shadow state)’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Ian Bremmer, *Every Nation for Itself: Winners and Losers in a G-Zero World* (New York: Penguin, 2011), pp. 137-139.

- ‘미중관계 대응팀’은 정부와 학계의 실력 있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기 부정기적으로 현안 이슈는 물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 내에 상설기구 또는 비상설 플랫폼의 형태로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
- ※ 미국의 경우 국방부에서 매년 『중국군사력보고서』를 발간하고, 의회에서도 초당적 자문기구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를 설립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며 권고안을 내고 있음

## 참고문헌

- 김성길. “중국의 반접근(A2), 지역거부(AD) 군사능력 평가,” 『군사논단』, 제70권(2012).
- 박병광. “국제질서 변환과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국방연구』, 제57권 1호(2014).
- 전재성.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제51권 3호(2008).
- 최강. “미국우선주의 대 중국몽의 충돌,” 『미래한국』, 2019년 3월 28일.
- Bremmer, Ian. *Every Nation for Itself: Winners and Losers in a G-Zero World*. New York: Penguin, 2011.
- Haley, Nikki. “How to Confront on Advancing Threat From China,” *Foreign Affairs*, July 18, 2019.
- Harding, Harry.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2.
- Lampton, David M.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S.-China Relations, 1989-20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Pence, Mike.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Hudson Institute Remarks*, October 4, 2018.
-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7, 2018.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 Wall Street Journal*, May 19, 2019.
- Wall Street Journal*, June 21, 2019.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關於中美經貿磋商的中方立場』. 北京: 人民出版社, 2019.
- 『環球時報』 2019年 8月 25日.



## Abstract

---

###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and South Korea's Policy Directions

The world is now watching the beginning of the hegemony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new hegemony war of the 21st century is characterized by a confrontation surrounding the rule of international norm and order to avoid the danger of the destruction of the two rivals by total war. China believes that the current trade war is in fact the US declared war on China, not just a dispute over trade and commerce. China says it wants equal, mutually beneficial and sincere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it will never yield to unilateral and irrational pressure. The economic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began with the tariffs war, has already turned into a technology war. In the near future, it will rapidly expand to exchange rates, defense, and security. As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South Korea's dilemma will increase. South Korea needs to recognize that the US-China trade dispute is not a short term issue but a long-standing 'prelude of hegemony competition'. As a middle power country, South Korea needs to make clear its strategic national interest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organize a professional team at the Blue House to deal with the problems arising from US-China conflicts.

---

Keywords: confrontation, hegemony, tariffs war, US-China relations

---

# INSS

## 전략보고

February 2020. No. 67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http://www.inss.re.kr)